다산포럼

정유년 새 아침의 꿈

김 정 남
언론인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해 이른 봄, 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박근혜에 대하여,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조선일보 2012년 2월 11~12일 자) 이 보도가 나간 뒤, 협박성 경고와 몸조심하라는 충고를 동시에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다.

내가 박근혜는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한 것은 그가 시대에 역행하는 인물인 데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킬 수 있는 소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역사는 반민주에서 민주로, 불의에서 정의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가는 것이 정도인데, 그는 존재 자체로 역사가 흘러가야 할 정(正)의 방향에 역행하는 사람으로 내게는 보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유신 시대에 부당하게 처형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가 당선되면 역사가 후퇴하리라던 나의 예언은 용하게도 들어맞았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명쾌하게 "블랙리스트는 이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핍박한 범죄 행위로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30년 뒤로 돌려놨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박근혜 후보를 보았던 눈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또 순진했던 것인가를 나날이 절감하고 있다. 처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대통령 아닌 대통령, 참 못난 대통령을 가졌었구나 생각했다. 그 후 양파 껍질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듯, 박근혜와 최순실의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는 국민으로서의 참담한 느낌과 함께 참 나쁜 대통령, 참 못된 대통령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최근 들어 특검과 헌재 등에 대응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과 예의, 그리고 양심이란 것이 남아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추위와 함께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자발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맞선 맞불 집회는 그 기세가 커지는 모양새라고 한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해외동포 사회에서조차 촛불이냐, 맞불이냐로 편이 갈라지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맞불 집회에 고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누가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켰는지 스스로 먼저 물어볼 일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 했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격동은 아주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에서 한반도를 향해 몰아치고 있는 파도는 결코 예사롭지가 않다. 가계 부채와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경제 위기 또한 겹치고 있다. 이제 이 나라, 이 공동체는 침몰할 것이냐 분열될 것이냐는 절체절명의 두 가지 위험 앞에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행여 시간을 끌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맞불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커지면 탄핵이 물 건너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다. 그런 조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결말이 나든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탄핵에 앞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국민의 가슴 속에 인간 박근혜에 대한 아련한 미련 한 가닥이라도 남겨 놓고 가는 길이다. 아직도 애국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12척의 배는 남겨 두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분명히 한다면, 정치적 조율을 통해 빡빡한 정치 일정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그보다 앞서 적어도 국민이 두 쪽으로 완전 분열되어 극한으로 대립하는 것만은 피할 수가 있다. 각 정당 대표, 대선 주자, 그리고 정치·사회 원로들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구성,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외교·안보·경제 문제, 개헌과 대선 문제 등의 당면 현안을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거기서는 도토리 키재기 식 대선 주자들의 각개약진이냐, 차기 정권을 협치를 통한 과도정권으로 설정하고 통합 국민후보를 낼 것이냐, 개헌을 전제로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명예롭게 회수하기 위한 현재의 탄핵 국면을 어떻게 수렴하고 헤쳐 나가느냐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한강의 기적과 가장 압축적인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취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정유년 새 아침에 내가 꾸는 꿈같은 이야기다.

청춘 톡·톡

소중한 세상, 더 소중한 생명

김 수 경
전남대 유기동물보호소 봉사동아리 회장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길목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와 마주쳤다. 고양이는 지난밤 내렸던 눈이 꽁꽁 얼어붙은 길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추위와 맞서고 있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늘 가방 속에 챙겨 다니던 사료를 꺼내주고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10년 전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나에게 친구,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레 주인 없이 밖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길고양이에게로 번졌고, 늘 측은한 마음에 가끔 사료를 챙겨주곤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봄,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택 계단 밑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물어왔다. 어미가 잠시 먹이를 구하러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일단은 잠시 지켜보자고 답변했다. 당시 나는 타지에 있었기에 3일 후 직접 보러가겠다고 했다. 그 사이 어미가 간간이 오가며 새끼들을 돌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광주에 도착하기 직전 새끼고양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됐다. 그 일 이후 나는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 길로 광주동물보호소로 발길을 옮겼다. 그 아기 고양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달래기 위해. 유기동물들을 마주하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버려지고 상처받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모여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기에 질병에 취약한 보호소 내 동물들은 생면부지의 이들에게도 서슴없이 다가와 얼굴을 비비기도 한다. 오늘이 마지막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처럼.

작은 계기로 시작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은 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물보호소 일손 부족문제를 알게 됐고, 학교에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동아리를 만들게 됐다. 지금은 교내 정식 중앙동아리 인준 과정에 있다. 회원들과 매달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비롯한 겨울철 길고양이를 위한 집을 설치하는 일을 같이하고 있다. 내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다친 고양이를 위한 치료비 모금활동이었다. 지난해 가을 길고양이 한 마리가 골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 모금운동을 하게 됐다. 그리고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50여 만 원이 모였다. 덕분에 고양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사람에게 입양됐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고양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기꺼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곳곳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 과거에는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팻팸족' 내지 '캣맘'에 불과했으나, 이를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됐다.

세상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에는 아직도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한국의 동물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강아지 공장'은 물론, 각종 동물학대와 이웃주민의 반려 동물을 잡아먹은 사건까지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의식과 제도는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비율은 약 22% 수준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그저 가축 또는 물건 정도로 취급하면서 동물보호법이 존재함에도 처벌수위도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앞으로 반려 동물의 가구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막을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사람들의 의식 부재가 더해져 휴가철, 연휴 때마다 서슴없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자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할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개선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기 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이 답이다

이 왕 무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9.8%, 더욱이 실업 체감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률 감소라는 근원적인 처방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역할자인 산업체와 지방정부, 고등직업교육기관 등의 협력으로 전통적인 산업정책론이나 인적자원관리론의 틀을 사회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는 사회를 움직이는 수단 매체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혁명(3차 산업혁명)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퀀텀점프(Quantum Jump)를 경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 즉,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 국가·지역산업의 흥망은 물론 국가·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frame)으로 제안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세상에 던진 화두다. GPS(위성측위시스템), IOT(사물인터넷), Big Data(빅데이터), VR(가상현실), Ubiquitous Computing(유비쿼터스 컴퓨팅), Self-driving System(자율주행시스템), S-mart City(스마트 시티), 3D printing 등이 미래 산업을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기술로 소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전국 만 19~34세 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넘는 대다수가 4차 산업혁명이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12.4%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준비상태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융합'을 핵심요소로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구조, 노동시장, 직무역량 변화에 대비한 일자리창출 역할자들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유연한 수급체계의 중점역할을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전문대학 등)에서는 중견기술인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교육목표에 부가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융합'적 차원을 고려한 확장적 교육의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는 지적(cadastre)이라는 전통적인 토지 관리의 교육범주로부터 위치정보 서비스 기초가 되는 GPS와 디지털지도제작 기술과 관련된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Geo-DT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국토공간관리의 교육기관이다. 최근에는 3차원 공간정보 생성과 모델링 관련 최신 기술(Dron, PIX4D) 교육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국토공간 정보 관리를 위한 인재배출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예상컨대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하게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5년 뒤 혹은 10년 뒤,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융복합 교육환경 조성 및 확대, 사회맞춤형중점학과 확대, 온라인 공개수업 확장 등의 변화를 고등직업교육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실업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사라지거나 새로 나타난 일자리를 위시한 노동시장 환경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경험한 대약진과 변화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 평가의 긍정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교토삼굴'(狡兎三窟) 처럼, 새로운 해결책 모색을 위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자의 협력적 전략 마련의 기회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구직을 원하거나 혹은 희망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위주 융합교육에 참여해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社 說

정치권 탄핵 정국의 설 민심 제대로 읽어야

설 연휴 기간 동안 화제는 단연 박근혜 대통령의 장외여론전이었다. 박 대통령은 설 직전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밝혀 왔던 입장을 고수하며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기업을 겁박해 재단기금을 모금한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를 통해 문화계 인사들을 통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정세력이 대통령의 직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배후에서 기획하고 관리했다며 탄핵소추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취임 4년 만에 국내언론과 단독인터뷰를 가진 것은 탄핵심판 시한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통령 자신의 육성을 통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를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시청한 국민은 설 연휴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다시 한번 분노를 삼키며 "대통령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느냐"고 지탄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에 대한 분노와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경제도 살려 줄 것을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하지만 문(文)은 싫고 안(安)은 뭔가 부족한 거 같고 그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매출이 줄고 손님이 아예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을 보는 설 민심은 어수선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급하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정작 지역 인재 채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지역 인재를 고용한 비율이 평균 12%에 그치는 등 생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인재 활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다.

최근 국회 교문위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3년간 109개 공기업의 지역 인재 고용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들 공기업의 채용 규모와 지역 인재 비율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8693명 가운데 10.2%인 888명이, 2015년에는 8934명 중 12.4%인 1천109명이 지역 인재였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의 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527명 중 112명), 경북이 17.4%(1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전남은 11.4%로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지역 인재 고용률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8.8%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 인재 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역 인재 채용 관련 규정과 관련이 있다.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때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염병(染病)

"전라도 각 고을의 백성 가운데 바야흐로 염병(染病)을 앓고 있는 사람이 3628명이고 사망한 사람이 947명인데,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숙종 45년(1719년) 음력 2월 13일자 조선왕조 실록 기사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실록 홈페이지(sillok.history.go.kr)에 검색어로 '염병'을 입력하면 154건의 관련 기사가 뜬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숙종 치세기에 몰려 있다. 특히 1717년~1719년 3년간 염병이 전국적으로 창궐했던 모양이다.

이재운·박숙희 편저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1000가지'를 보면 염병은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편저자는 "이 병에 걸리면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는데 열에 아홉은 죽어 나갔다. 그러므로 '염병할 놈'이라는 욕은 '염병을 앓아서 죽을 놈'이란 뜻의 무시무시한 욕설이다"라고 설명한다.

장티푸스는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다. 1853~1856년 벌어진 크림전쟁 때에는 장티푸스 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수가 전사자의 10배에 달했다고 한다.

전염성과 사망률이 높은 장티푸스의 정체를 푼 이는 영국 세균학자 알모스 라이트(1861~1947) 경(卿)이다. 그는 1898년에 환자와 보균자의 대·소변에서 장티푸스 병원균을 발견했다. 그는 장티푸스 전염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식사 전이나 용변을 본 후 손을 씻는 등 위생 관리를 엄격하게 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후일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염병하네'란 말이 화제가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때 현장에 있던 60대 여성 미화원이 "염병하네"라고 중얼거린 말이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누리꾼들은 '사이다 발언'이니 '일침 굿'이니 하며 댓글을 달았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사용되는 이 말에는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최씨의 '뻔뻔함'에 대해 분노하는 민심이 응축돼 있다.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일갈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0-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